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도시 미래정책 개발체계 연구	조영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이여경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윤주선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김은희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이규철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방안	박성남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향 연구	김용국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이민경
	신 기후체제 대응 건축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 연구	이은석
	차세대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 및 도시공간의 대응방안 연구	오성훈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엄운진

기본과제

①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도시 미래정책 개발체계 연구

인공지능과 스마트사회 등 제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통념 관행 경험 직관에 의존하던 의견기반 정책(Opinion-Based Policy)이 증거기반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making)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각국 정부는 데이터라는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활용해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정보 공개와 개방을 확대하여 지난 2013년 6월 정부3.0 추진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로 텍스트마ining, 소셜네트워크 분석, 계량정보학 등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통합적 미래연구가 늘고 있다. 주요 국가 정부와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각종 문제 해결 및 이슈 대응뿐 아니라 미래 전략과 수반되는 전략적 의사 결정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건축 도시 분야 정책은 주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전문가 의견과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의 이해에 따라 의견과 결과가 왜곡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도시 분야의 사회·경제 환경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도시 정책 개발체계가 필요하다. 건축·도시 정책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며, 정책 수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증거기반의 정책 개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빅데이터 관련 선행 이론을 검토하면서 건축·도시 분야 빅데이터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별 특성을 연구하고 각각의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모델을 설계하여 건축·도시 분야 정책개발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요구를 객관적으로 분석·제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부3.0 기반의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영진

②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정부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합리화와 인허가 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14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건축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건축행정과 이로 인한 시간 경제적 손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일선 지자체에서는 건축행정 업무와 민원의 증가로 조직과 인력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가 우리나라 건축행정에 대해 “건축품 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등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즉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건축행정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입법행정이었으며, 수요자를 위한 행정서비스 개념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 역시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개념 정립과 현황 진단을 토대로 수요자 입장의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의 불편사항과 서비스 공급자인 정부나 지자체의 여건을 분석하여 현행 건축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내외 정책과 제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와 같은 건축행정서비스의 개념 정립, 현황 진단 및 국내외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종합하여 궁극적으로 건축행정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려 한다. 이를 통해 건축행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행정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여경

③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선도지역 국비지원 사업이 2017년 12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민간의 참여가 저조하며 선도사업 종료 이후 지속화 방안이 미흡한 지역이 많다. 도시재생 국비지원사업은 지원기간 4~5년 내의 완결적 사업이 아닌, 지원기간 동안 마중물 예산을 토대로 지원 종료 이후 자생적 도시재생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자생력을 키워가기보다 보조금 의존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부채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속화 방안 마련이 어려운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에도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의 자생력 강화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자생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 연구에서는 민관협력에 의한 도시재생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력을 기초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춰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사업 방식은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제도화되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민관협력 도시재생 체계 구축을 위한 주체별 역할 정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사업성 확보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연구는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와 실제 대상지의 유휴 공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한다.

이 연구는 국비지원 종료 이후의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자생적 재생 방안 모색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공적 부동산(public real estate: PRE)의 관리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주선

4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9만 1,000명(3.1%)이었으나 2015년 662만 4,000명(13.1%)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0%가 노인 인구로 구성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안전사고의 증가와 그로 인한 비용문제로 직결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 해 노인 사망자 수 1만 995명 중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그로 인한 손실액을 17조 1,11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은 단순히 노인 개인의 안전성 확보 차원을 넘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비용 문제와 직결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5년)’을 발표하고 ‘공공실버주택’, ‘고령층 전세임대 신규공급’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활공간에서 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2015년 기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427개소 중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취약성을 고려한 안전·편의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이 7%(31개소)에 그치는 점도 현행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국가의 주요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노인복지법」으로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노인복지정책 분석,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관한 현행 제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분석, 정책 및 현행 제도 간 상충 사항 도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이며, 이러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은희

* 최문갑(2009), 「노인의 안전사고 발생 장소별 사고유형 차이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2.

5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근대건축물은 사용한 지 수십 년이 지나 다양한 수준의 보강과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철거 후 신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증대 등의 이유로 근대건축물에 대한 철거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 학교, 공장, 공공시설 등의 근대건축물을 모두 보존하여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축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선행 단계로서 존폐를 논의할 수 있는 기준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1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와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우수건축자산’ 제도는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 기준에 있어서는 경관·역사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 등 보존적 가치를 중심으로 근대건축물을 평가하고 있다. 활용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미래 가치로서 경제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방법론이 없는 상황이다. 보존과 활용의 가치는 어느 한쪽의 가치를 추구하면 다른 한쪽의 가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고, 예비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와 건축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의 상충되는 가치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보존과 활용을 위한 근대건축물 가치 기준의 개념을 정립하고, 근대건축물의 가치 기준과 세부 지표의 구체화에 대한 다양한 수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문화재로서 보존 가치와 건축자산으로서 활용 가치의 기준 및 구체적인 세부 지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근대건축물의 가치 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근대건축물의 활용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등록문화재 제도의 보완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규철

⑥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방안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캐나다·호주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거안정화 프로그램이나 지역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CLT)을 지속가능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공동체토지신탁은 보통 토지임대 방식을 통해 초기 주거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추고, 재판매 시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균형 있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어 지역 발전에 따른 가치를 공유한다.

최근에 전세 부족난과 월세 급증 및 임대료 급증으로 인해 삶의 안전성이 악화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근린형 도시재생사업 등 쇠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조금 재정지원 종료 후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발전 가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민들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지속적인 지역자력형 도시재생, 지역 관리를 위해 공동체토지신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토지신탁과 유사한 형태로 개발신탁, 지역사회회관리를 위한 협동조합 형식의 도시재생 신탁의 도입 가능성과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토지신탁 제도 운영요소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향후 공동체토지신탁 적용과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토지신탁 도입방안 모색을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에 답해 보고자 한다. ▲국내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운영요소는 무엇인가? ▲공동체토지신탁 도입·적용이 가능한 부문과 도입 시 제약요소는 무엇인가? ▲공동체토지신탁을 건축도시공간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공동체토지신탁 제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입·적용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제도의 발전·개선 필요사항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박성남

⑦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향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열섬현상, 홍수, 미세먼지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이다. 도시녹지는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공적 재원을 투입해 도시녹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오히려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건축물의 녹화가 도시녹지 확충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다.

영국·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건축물 조경을 녹색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요소로 인식하여 도시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건축법」 안에 '대지의 조경' 조항을 마련하였다. 40년이 지난 오늘날 '대지의 조경' 제도는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 요소로 인식되어 점차 완화·폐지되는 추세이다. 건축물 조경 면적 확충과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 구현을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정책방향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건축물 조경 제도와 조성·관리 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건축물 조경 관련 법령과 조례, 건축물 조경 설계-인허가-준공-유지·관리 과정을 검토·분석한다. 둘째, 해외 건축물 조경 제도와 조성·관리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건축물 조경 제도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녹지가 부족하며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역을 선정하여 건축물 조경 제도의 정량적 정성적 변화에 따른 환경적 파급효과를 측정한다. 넷째, 건축물 조경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조경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김용국

8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옥처럼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녔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지역의 가치 있는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관리·활용할 수 있으며,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개별 건축자산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간 환경까지를 포함한 면(面) 단위 관리까지 가능하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역 내 기반시설의 정비와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최소 2~3개의 기존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중복될 여지가 많다. 또한 면 단위로 건축행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간 정합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건축자산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 연구에서는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지역·지구·구역 제도의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건축자산진흥구역과의 중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건축자산진흥구역의 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과 도시재생·경관 개선·문화융성 등 다양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민경

9 신 기후체제 대응 건축부문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 연구

2016년 4월 22일 우리나라는 168개국이 참여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협약 참여에 따른 국내 후속절차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 이행이 필요하게 되었다. 교토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적 노력은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거듭할수록 강화되어 왔다.

파리협정은 기존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량에 따른 차별적 실천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지정사실로 받아 들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정책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온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적응에 따른 변화 양상과 평가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역량에 관한 연구가 보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대상 중 건축물은 국민 대부분의 삶터이자 기후변화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접적 영향을 받는 대상인 거주자는 우리 스스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은 건축물과 거주자로 한정하고, 현재 건물이 지닌 적응능력(Capacity)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Impact)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축물이 거주자로 하여금 현재 건축물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확인하고 계획적 대처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즉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지표화하고자 한다. 이때 인구사회학적 지표를 활용하여 거주자의 소득·건강 수준에 따라 건물의 회복탄력성이 연동할 것을 가설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거주자의 항상성, 건축물의 취약성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이 연구과제의 주요한 방향이다.

이에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방법론을 정립하고, 관련 연구의 기초데이터로서 건축물과 거주민을 중심으로 한 연차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리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여 미래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의 변화를 지리정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은석

⑩ 차세대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 및 도시공간의 대응방안 연구

차세대 교통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의 교통체계가 비약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그 정도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건축과 도시공간의 발전과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러한 공간적인 변화에 건축과 도시공간의 이용과 관련되어 계획·설계·운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떠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지 모색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대중교통체계, 승용차, 물류체계, 신호체계 등의 광범위한 변화로 인해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 가로의 설계, 개별 건축물의 입면이나 평면, 주차장의 계획과 설계, 이러한 공간적 요소들에 대한 규제 등이 전반적으로 재고될 필요성 있다. 또한 이러한 선제적 검토를 통해 교통수단이나 교통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차세대 교통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건축적 질과 도시공간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전개될 차세대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른 건축·도시공간의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교통기술의 발전상을 예측하기보다는 건축·도시공간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통기술 발전 로드맵 등을 검토하면서 건축·도시공간 영역에의 함의가 큰 분야를 도출하고, 그 분야의 향후 변화 및 발전상에 대한 예측을 시행하고자 한다. 도출된 유관 교통기술 분야의 발전상 예측 결과를 토대로 차세대 교통기술이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 미칠 영향력을 추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건축·도시분야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건축·도시공간의 측면에서 교통기술의 적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측면에 대한 환류요소의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기존의 교통기술 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의 협력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통분야뿐만 아니라, 건축·도시 분야의 전문가들에 걸쳐 폭넓은 자문을 통해 추정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오성훈

⑪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그동안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진행되어 온 건축·도시 분야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의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회고의 시점이 도래하였다. 그중에서도 공공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자체 정부에 의해서 기획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195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공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성과정은 기획부터 발주·계약(설계자 선정)·설계·시공·유지·활용까지 전 단계로 하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초연구로 단기간의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한국 건축의 역사에 대한 콘텐츠화를 공공건축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 대한 방향도 검토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공공건축물을 통해서 본 건축 담론을 시기별·용도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 의도는 건축계에서만 다루어졌는지 또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는지, 당시에 논의된 담론은 현재에도 유효한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러한 건축 도시 담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업과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등 관련 사업의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엄운진

2017 건설산업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1월 24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2017년 건설산업의 10대 정책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2017년 건설산업에 대한 관·산·학·연의 관심도를 높이며 상생협력의 건설문화를 증진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기조발제를 맡은 이복남 교수(서울대학교)는 '한국 건설을 법과 제도로부터 해방시켜라'는 주제로 국내 건설이 처한 현실을 지적하고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건설정책, 주택·토지, 건설기술, 도시재생에 대한 부문별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영덕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규제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건설산업 환경과 규제의 특성을 소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

과 경제 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건설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성일 본부장(국토연구원)은 '주택시장 및 주거복지 이슈와 정책 대응방향'을 주제로,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증대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박환표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건설기술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건설산업의 이슈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건설기술에 대해 소개하였다.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는 네 번째 주제발표에서 '건설산업의 융합정책 방향'을 주제로 건설산업 융합의 현황 및 한계를 설명하고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융합정책 및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성남 박사(건축도시공간연구원)는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도시재생 부문에 있어서의 건설산업 관련 이슈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김명수 교수(가톨릭대학교)를 좌장으로 조준현 본부장(대한건설협회), 이원규 본부장(대한전문건설협회), 김정욱 박사(한국개발연구원), 김정희 과장(국토교통부)이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백혜인



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2월 23일 서울 퍼시스 본사 Xspace Hall에서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존중받는 생로병사'라는 대 주제 아래, 지난해 '출산환경을 생각한다'에 이어 올해는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통해 육아환경의 물리적 환경과 함께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선영 교수(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제 배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소통과 돌봄이 있는 동네'를 주제로, 유명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가 본인의 경험을 담은 성미산 마을 공동체에서의 공동육아 사례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유다는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는 '육아 파트너십을 위한 도시공간 환경'을 주제로 육아 주체에 따라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어경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디자인 환경'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경 부연구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디자인 관리의 필요성과 관련 지침 실태를 설명하고, 디자인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혜란 소장(우리도시기술사사무소)을 좌장으로 발제자들과 이경선 교수(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조진일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자들은 보육환경의 질에 대한 고려와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는 건설 분야 여성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여성의 시각에서 보육환경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백혜인

news